입건된 前조합장 출마·홍보원 주민방문… 선거규정 무색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파일

❸ 조합장 선출선거 〈끝〉

前조합장 A씨, 도정법 위반 벌금형
총회 통해 해임… 다시 선거 출마
조합 내 불공정선거 논란 확산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조합장 비리로 수차례 소동을 겪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9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그동안 조합장의 비리 행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초대 조합장과 전임 조합장 등 2명이 모두 구속됐으며 현 조합장 A씨 역시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총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약 290억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를 일부 지급해 조합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조3181억원의 공사비를 기존 계약 대비 38%가량 증액시키려다가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의 검토 결과 약 1500억원을 삭감당했다.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A씨는 시공사와 거래를 통해 공사비 계약금 20%를 입주일로 돌리는 특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215억5000만원을 시공사에 4.5%대의 이자를 주도록 변경해 조합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합장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지위에서 물러났지만 오는 17일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선거로 도마위에 올랐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내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15동의 철거 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홍보요원(OS)을 고용해 주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전개 중이다. 조합 내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OS요원을 이용해 오는 17일 예정된 총회를 전자투표제가 단지 내 야외에서 개최하도록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조합원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조합장 후보로 확정된 이는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도정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이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조합장 비리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과기부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소형발사체 개발"

한-미 정상회담 우주 분야 성과 실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본격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한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반영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 분야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우주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심의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한 고체추진제 기술을 활용해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고체연료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해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초소형위성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저궤도 소형위성 반복 발사 수요 대응에도 고체연료 발사체가 더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사장 등 민간 발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사장은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내 설치한다. 발사장은 단기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발사체 기반으로 우선 구축하고, 향후 액체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에 활용되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 발사체 상단에 설치돼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or) 개발도 검토한다. 발사체에 킥모터를 적용하면 탑재되는 우주탐사선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임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데,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킥모터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2022년부터 본격 구축할 예정으로, 완료 후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국가 인프라로 작동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공동성명에 따른 미국 GPS와 공존성, 상호운용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GPS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더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전망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공공 중심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돼 새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ETRI,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오토비' 개발

음성인식 통해 직접 제어

국내 연구진이 중소기업이 만든 전기차에 고성능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를 탑재해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9일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연구원을 순환하는 시범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차에 운전대가 남아있거나 필요할 때 운전자 개입이 이뤄지는 2~3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ETRI는 운전석이 필요 없는 차를 구현할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율주행 4단계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연구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이름은 '오토비(AutoVe)'다. 자율주행을 뜻하는(AutonomousDriving)에 이동체(Vehicle)를 합성한 이름으로 운전자가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을 상징한다.

셔틀 서비스는 주차된 오토비를 모바일 기기로 호출하면서 시작된다. 다가온 오토비에 탑승하고 "하이 오토비 7연구동으로 가자"라고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목적지로 나아간다. 탑승자는 운전할 필요가 없어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오토비는 연구원 안에서 안전규정에 따라 25km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이동한다. 탑승 예약은 방문동 키오스크로 가능하며 QR코드로 오토비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운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 연구동을 지나는 노선으로 이뤄진다.

연구진이 오토비에 적용한 고성능 AI 알고리즘은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실시간 처리해 환경과 주변 환경, 객체를 인식하고 스스로 주행 경로를 만들어낸다. 센서 정보를 원격지와 통신하며 처리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ETRI

사용자 편의를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기술도 탑재했다. 탑승자는 오토비에게 AI 비서에게 말하듯 차를 호출하거나 탑승한 뒤 "목적지로 가자", "정지", "회피" 등 원하는 명령을 내려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

/채윤정 AI전문기자

한은

1분기 韓경제 성장률 1.7%

수출과 소비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됐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상향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은 4%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속보치 대비 서비스업(-0.1%포인트) 등은 하향 수정된 반면 제조업(+1.1%포인트) 등은 상향 수정됐다.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0.4%포인트) 등이 하향 수정됐지만 재화수출(+1.3%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

분기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3.2%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2.2%로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성장세다.

작년 경제회복세를 수출이 이끌었다면 올해 1분기는 민간소비가 주도했다.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전분기 -0.6%에서 0.6%포인트로 반등했고, 주체별로도 민간 기여도가 전분기 0.9%에서 1.3%로 확대됐다.

한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내수와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 했다"며 "내수 기여도가 1.9%포인트로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플러스(+)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민간소비는 1.2% 늘어 전분기(-1.3%)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등 내구재와 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됐다.

소비까지 살아나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4.0%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2~4분기에 0.6%만 나와도 연간 4%가 가능하며, 0.7~0.8% 안팎이면 연간 4.1~4.2%로 높아진다.

/안상미 기자 smahn1@